

 기획재정부		보도설명자료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 포일시	2021. 10. 25.(월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김태곤 (044-215-7130)	담당자	윤흥기 사무관 yhk0306@korea.kr
	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허승철 (044-215-7330)		김남희 사무관 hellonavi@korea.kr
	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장보영 (044-215-7230)		원선재 사무관 consecra@korea.kr
	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 박재형 (044-215-7530)		김낙현 사무관 kimnh777@korea.kr

제목: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예산안 분석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관련 설명

□ '21.10.24일 조간으로 한국경제, 매일경제, 서울경제 등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분석 관련 보도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※ 붙임 : 주요 언론보도 관련 설명

1.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수요파악 없이 예산 확대,
재정투입 효율성 저조 우려

- 한국판 뉴딜은 경제·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·그린 전환 가속화, 청년지원·격차해소 등을 위한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마련
- '22년 예산 33.7조원은 뉴딜 계획에 따른 연차소요를 기초로, 사업 타당성·추진성과·수요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
 - 향후 관계부처·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,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

사업명	'22안 (억원)	지적사항	보도설명
인공지능 학습 데이터	6,732	○내년 예산을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2배 증액	○ 실집행률* , 경쟁률** 등 감안 뉴딜 계획에 따라 증액 * '20년 99%/ ** '21년 3.6:1 ○ 타당성 재조사 의무사업 아님
AI 바우처	1,120	○지원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 했는데 타당성 검증 없었음	○ 경쟁률* , 사업성과** 등 감안 뉴딜계획에 따라 증액 * '21년 5.4:1 / ** '20년 매출 +245억 ○타당성 재조사 의무사업 아님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	821	○예타 면제 ○사업계획적정성 검토는 '22.6월이나 결과 도출	○월세상승 등 청년주거지원 긴급성 고려하여 편성 ○ 사업계획적정성검토 조속 마무리 후 결과 반영하여 집행 계획
그린스마트 스쿨	6,075	○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 지연 예상 *대상학교 선정: (계획) '21.2월 (실제) '21.6월 발표	○ '21년 예산의 연내 집행 등 원활한 사업추진 노력 강화 * 교육부-시도교육청에서 개별 학교의 사업점검 상시 진행 등
탄소중립 그린도시	48	○ 지자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 불확실	○ 연내 대상지 선정 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- 내년 1/4분기 대상지 선정 완료 후 사업 정상 추진 계획

2. 집행부진 사업이 다수 증액되었고, 신규사업의 법적근거 및 예산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 관련

□ '22년 예산편성 시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반영 하였으며, 집행부진·사업실적 저조 사유 등이 해소된 경우에 전년대비 증액

○ 또한, 신규사업도 사업의 시급성·중요성 등을 감안하되, 사전절차·법적근거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

사업명	'22안 (억원)	지적사항	보도설명
집행부진 지적사업 전년대비 증액 사유			
주택성능 보강	30	○ 집행실적 전무하며 지원의 법적근거가 없음	○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기 실시('21.6월) → 집행실적 개선전망 ○ 지원 법적근거 있음 (건축물관리법 §29 ③)
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	81	○ 실시설계 중단 사업재개 여부가 10월 국립공원위 결과에 따라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	○ 국립공원위와 협의완료 후 내년 설계 마무리 및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(예산 미반영할 경우 사업 1년 지연 초래)
DMZ 평화적 이용사업	246	○ 남북관계가 불확실해 시행시기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 33.9%(+62억원) 증액	○ 우리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* 중심으로 증액 → 차질없는 사업 집행 가능 * 평화의 길 ('22안) 97(+67억원)
법적근거·예산검증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신규사업			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	821	○ 예타 면제 ○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는 '22.6월이나 결과 도출	○ 월세상승 등 청년주거지원 긴급성 고려하여 편성 ○ 사업계획적정성검토 조속 마무리 후 결과 반영하여 집행 계획
백신구매	2.6조원	○ 1인당 6회 접종 가능 물량으로 부스터샷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할 때, 접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	○ 변이 바이러스, 백신공급 불안정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물량 확보 필요 ○ 향후 방역당국 중심으로 접종계획을 수립·추진예정

3. '퍼주기 복지'에 따른 적자보전 등으로 내년 8대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이 91조원이라는 지적 관련

- '22년 예산안에 8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91조원*은 '퍼주기 복지'로 인한 적자보전금이 아님

* 국민연금 30.9조원, 공무원연금 20.1조원, 사학연금 4.6조원, 군인연금 3.7조원, 건강보험 11.4조원, 노인장기요양보험 2.0조원, 구직급여 11.5조원, 산재보험 7.1조원

- 4대 연금(국민·공무원·사학·군인연금) 기금의 지출예산 59.3조원 대부분은 연금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인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연금급여를 받는 것으로 적자보전과 무관
 - 연금 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적자보전금은 공무원 연금 1.4조원(지자체부담 제외), 군인연금 1.7조원 등 총 3.1조원에 불과
 -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산재보험급여 18.6조원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업·산재 등 발생시 지급하는 것으로 적자보전과는 무관
 -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원 명목의 13.4조원은 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거나, 공무원의 고용주체로서 보험료를 분담한 것으로 적자보전금과는 성격이 상이
- 한편,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경우, 기존 「20-24 국가재정 운용계획」 작성시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영향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전망하였으나,
 - 이번 「21~25 국가재정운용계획」 작성시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따른 고용상황 개선 등을 전제로 기존 가정을 보다 현실화하여 전망

4. 청년 지원 예산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관련

- 청년 지원 예산은 청년층의 미래 대비 및 출발선상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, 자산형성, 주거, 교육·복지 등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,
- 특히 소득계층별 형평성, 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

사업명	'22안 (억원)	지적사항	보도설명
청년 희망적금	47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년 가입시 저축장려금은 36만원에 불과 *월 50만원씩 2년 가입시: 1년차 12만원(2%) + 2년차 24만원(4%) ○ 재형저축 ('13~'15)에 비해 가입기준이 까다로워 지원수준 상향 등 검토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①시중은행 이자에 추가로 장려금 지급, ②비과세 혜택 및 ③짧은 만기(2년)로 他 민간적금상품보다 유리 * 시중은행이자 + 장려금 지급시, 연평균 5% 수준 이자효과(비과세), → 민간적금상품(0.8~1.57%) 보다 높은 이자율 ○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유도를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중복가입 가능 * (가입기준소득) 재형저축 5,000만원 vs. 청년희망적금 3,600만원,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5,000만원
국가 장학금	4.7조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인상시 소득역전 효과 발생 가능성*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결정 필요 * 8구간 지원단가 인상('21년 67.5→'22년 350만원)으로 9구간(미지원)과의 격차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2년 예산안에는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계층의 부담을 대폭 경감* * 5·6구간 : 368→ 390만원 7구간 : 120→ 350만원 8구간 : 67.5→350만원 ○ 재산·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은 소득경계로 인한 역전현상 우려가 있으나, - 서민·중산층 가구 대학생*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국가장학금 지원 취지에 보다 부합 * 1~8구간 : 기준중위 200% 이하 / 9구간 : 기준중위 200~300%